

2023. 9.

2023년 자체감사 결과 공개자료

[성덕면]



김 제 시
기 획 감 사 실

※ 본 감사결과 공개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김제시 자체감사 규칙」 제23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는 수정 또는 삭제하여 공개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처 분 요 구 목 록

성 덕 면

□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지적)			시 정				주의	훈계	개선	권고	통보
총 건수	신분상 조 치	재정상 조 치	소계	회수	추징	기타					
17	-	1,229	4	1	1	2	6	-	-	-	7

□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 건, 천원, 명)

연 번	건 명	처분요구			비고
		처분 종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계	17건		0	1,229	
1	휴가자 업무대행자 지정 소홀	주의			
2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주의			
3	세출예산 집행과목 적용 부적정	주의			
4	초과근무자 급량비 집행에 관한 사항	통보			
5	지역개발공채 소화 부적정	시정 (소화)		20	
6	도급계약 인지세 납부확인 업무 소홀	시정 (소화)		20	

연 번	건 명	처분요구			비고
		처분 종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7	건설공사(보조기층 소운반) 증빙서류 미비	주의			
8	주민세(재산분) 과세 누락	시정 (추징)		1,059	
9	청백-e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조치 소홀	통보			
10	수수료 납입 지연	통보			
11	인감증명서 위임장 업무처리 소홀	주의			
12	전입신고 사후관리 소홀	통보			
13	인감증명서류 이송처리 업무 소홀	통보			
14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적정	주의			
15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부적정	시정 (회수)		130	
16	장애인 복지(통합)카드 관리 소홀	통보			
17	의료급여증 관리소홀	통보			

[일련번호: 1]

김 제 시

기관 · 부서명	성덕면
제 목	휴가자 업무대행자 지정 소홀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내 용	

1. 관계 규정(판단 기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휴가의 종류)에는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다.

「김제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제4조(휴가의 절차)에 따르면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카드가 비치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근무상황카드가 비치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조례 제17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 명령권자의 휴가명령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휴가일 경우에는 휴가당일의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같은 규칙 제9조(장기간 근무지 이탈 시 업무인계)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될 때에는 그 담당사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행정안전부 예규 제196호(2022. 1. 1.)]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휴가를 승인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휴가로 인하

여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대행자 지정, 인계·인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성덕면은 소속공무원이 휴가를 실시할 경우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대행자를 지정, 인계·인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감사대상 기간(2021.4.1.~2023.3.31.) 동안의 휴가내역을 확인 한 결과 총 18건의 소속 공무원의 휴가 신청에 대하여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승인하여 복무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성덕면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2]

김 제 시

기관 · 부서명	성덕면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내 용	

1. 관계 규정(판단 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업무 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해야 한다.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서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서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고,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른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은 5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21조(집행현황의 공개) 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기관운영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동 훈령 [별표 3]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방법에 따라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장 단위로 집행내역을 공개하며, 항목은 사용자, 일시, 장소,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제로페이, 현금 등) 비목으로 구분한다. 공개주기와 시기는 최소 분기마다 공개하며 매 분기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며, 공개 방법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3] 업무추진비 공개 방법 예

2-1. 기관운영·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 기관장, 실국장, 지방의원의 경우

사용자 ¹⁾	일시 ²⁾	장소 ³⁾	집행목적 ⁴⁾	대상 인원수 ⁵⁾	금액 ⁶⁾	결제 방법 ⁷⁾	비목 ⁸⁾
도지사	2020-05-03 12:40	한○촌	시·군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단 간담회	20	200,000	신용 카드	기관
실국장	2020-05-05 12:55	김밥나라	지하철0호선 연장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철도협회)	15	150,000	신용 카드	시책
지방의회의장	2020-05-10 17:00	집무실	의회사무처 상근직원 결혼 축의금(김○○)	1	50,000	현금	의회운영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203 업무추진비 -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1.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 제값비 가. 실과소 운영에 따른 공통경비이므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 절대 사용할 수 없음 - 실과 소 전체 직원의 사기양양 경비 등으로 사용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럼에도 성덕면은

- 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근거하여 균형있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2021.04.01.부터 2023.03.31.까지 감사대상 기간 동안 총 39건, 15,735,000원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연간 집행계획 수립하지 않고 집행하였다.

- ②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원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기양양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나 특정부서원(팀)의 식사 비용으로 부적정하게 사용하였다.
- ③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기준에 따라 기관장 단위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 시 사용자, 일시, 장소,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비목으로 구분하여야 함에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외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까지 공개하면서 집행 일자, 통계목, 집행 내용, 금액만 공개하였다.

조치할 사항 성덕면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3]

김 제 시

기관 · 부서명	성덕면
제 목	세출예산 집행과목 적용 부적정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내 용	

1. 관계 규정(판단 기준)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 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 [별표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이 집행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사무관리비**”는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내용연수 1년 미만의 소모성물품 구입 시 집행하고, 자산취득비, 시설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공공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는 장비, 시설, 시스템 등에 부속되어 일부를 이루는 부품(물품)을 수리차원에서 교체하는 경우에는 본 과목에서 집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재료비”는 방역에 필요한 약품 및 재료비 기타로 사용 하도록 되어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성덕면은 감사 대상기간 동안 총 3건, 1,037,000원의 세출예산 집행 시 부적정한 세출예산 과목을 적용하여 집행하였다.

조치할 사항 성덕면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4]

김 제 시

기관 · 부서명	성덕면
제 목	초과근무자 급량비 집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조치	통보
재정상 조치	없음
내 용	

1. 관계 규정(판단 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 집행기준에 따르면 급식비의 집행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제로페이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증빙제도(현금영수증 카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4(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급량비 중 특근매식비와 같이 정기적으로 소액 예산지출 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1개월 미만)을 합산하여 1건으로 현금영수증 사용 가능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증빙서류로 회계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현금영수증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지출일을 포함하며, 법정 공휴일 및 토·일요일은 제외) 지출을 결정하여 해당 사업자 계좌로 대금을 입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성덕면은 총8건, 3,242,000원의 초과근무자 급량비를 집행하면서 2개월분을 합

산 집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성덕면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기 바랍니다.(통보)

[일련번호: 5]

김 제 시

기관 · 부서명	성덕면
제 목	지역개발공채 소화 부적정
행정상 조치	시정(소화)
재정상 조치	20,000원
내 용	

1. 관계 규정(판단 기준)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6조제1항(채권의 매입)의 [별표1] 기준에 의하면, ①100만원 이상의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의 경우 대금 청구액의 2.5/100, ②물품구매, 수리, 제조계약의 경우 대금청구액의 1.5/100의 채권을 소화하도록 되어 있고,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

같은 조례 제6조제4항과 관련된 [별표2]의 매입의무 면제대상은 ①일반운영비, 급량비,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물품 구매, ②마을 공동재산을 조성하는 행위, ③법인 합병 시의 자동차·건설기계 이전등록 ④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 업체의 용역계약 ⑤기타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성덕면은 2,430,000원의 대금을 지급하면서 공채매입액 20,000원을 미소화하였으며, 1,769,000원의 대금을 지급하면서 공채매입액 20,000원을 과소화하였다.

조치할 사항 성덕면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도록 주의하기 바라며, 미소화한 20,000원을 즉시 소화하시기 바랍니다.(시정-소화)

[일련번호: 6]

김 제 시

기관·부서명 성덕면
제 목 도급계약 인지세 납부확인 업무 소홀
행정상 조치 시정(소화)
재정상 조치 20,000원
내 용

1. 관계 규정(판단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에 따르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제1항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표 2] 금액 별 인지세 납부 세액

기재금액	세액(원)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상	20,00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상	40,000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상	70,000
1억원 초과 10억원 이상	150,000
10억원 초과	350,000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성덕면은 2022년 하반기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 납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서 작성을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성덕면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도록 주의하기 바라며, 미소화한 20,000원을 즉시 소화하시기 바랍니다.(시정-소화)

[일련번호: 7]

김 제 시

기관 · 부서명	성덕면
제 목	건설공사(보조기층 소운반) 증빙서류 미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내 용	

1. 관계 규정(판단 기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범위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업무를 행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자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르면 검사에서 계약 상대방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되어있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 감독자의 감독 의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자부)」 제13장 제6절(공사 설계의 변경) 등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계약 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24조(설계서

등의 검토)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서 등 계약문서와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 여부 등의 사항을 검토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성덕면은 총 3건의 건설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보조기층 소운반 공정 확인 및 증빙자료(준공사진대지) 없이 준공처리를 하였다.

조치할 사항 성덕면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8]

김 제 시

기관 · 부서명	성덕면
제 목	주민세(재산분) 과세 누락
행정상 조치	시정(추징)
재정상 조치	1,059,090원
내 용	

1. 관계 규정(판단 기준)

구)지방세법 제84조(신고의무) 및 지방세법 제84조(신고의무) 주민세 사업소분(구 주민세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김제시 시세 조례 제8조(신고의무)에 의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동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에 의거 과세기준일 주민세 사업소분(구 주민세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구 주민세재산분은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주민세 사업소분(구 주민세재산분)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지방세법 제80조(과세표준)와 제81조(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성덕면은 주민세(재산분) 대장 정비 소홀로 인하여, 총 4건에 대하여 주민세(재산분) 1,059,090원을 과세 누락하였다.

조치할 사항 성덕면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도록 주의
하기 바라며, 누락 과세분 1,059,090원을 즉시 추징하시기 바랍니다.(시정-추징)

[일련번호: 9]

김 제 시

기관 · 부서명	성덕면
제 목	청백-e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조치 소홀
행정상 조치	통보
재정상 조치	없음
내 용	

1. 관계 규정(판단 기준)

「김제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에 의하면 ‘자율적 내부통제’란 스스로 시에서 추구하는 행정책임의 목적과 규정이 각 부서의 공무원들에 의해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수단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공직비리 및 행정 능률의 향상을 제고하는 수단이며,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청백-e 시스템’은 행정업무처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비리 및 착오 예방프로그램으로써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같은 규칙 제7조(업무지정)에 따라 실무부서는 아래의 시스템 상황을 확인하여 수정 및 조치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위한 대상 자료관리
- 나. 청백-e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 및 관리
- 다.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통계관리
- 라.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확인·수정·조치 등

따라서 실무부서에서는 청백-e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수시 확인을 통해 경보사항 발생 시 오류를 확인하고 적기 내 조치 또는 제외 처리와 승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성덕면은 감사일 현재까지 모니터링 발생 건수 총 2건에 대해 기한 경과 후 처리하여 청백-e시스템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성덕면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기 바랍니다.(통보)

[일련번호: 10]

김 제 시

기관 · 부서명	성덕면
제 목	수수료 납입 지연
행정상 조치	통보
재정상 조치	없음
내 용	

1. 관계 규정(판단 기준)

「지방회계법」 제22조(수납기관) 제1항에 따르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은 그 수납을 담당하는 출납공무원(이하 “수입금출납원”이라 한다)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금고(교육비특별회계금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체신관서에 수납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같은 법 제2항에는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수납금의 납입)에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수납한 날부터 5일이 되는 날 까지 수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성덕면은 수입증지 수수료 관련 업무 처리 시 수입증지 수수료 수입이 발생할 경우 일일(당일)결산 후 이를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함에도 3건에 대하여 1일에서 최장 5일간 현금으로 보관하여 수입증지 수수료의 납입을 지연하였다.

조치할 사항 성덕면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기 바랍니다.(통보)

[일련번호: 11]

김 제 시

기관 · 부서명	성덕면
제 목	인감증명서 위임장 업무처리 소홀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내 용	

1. 관계 규정(판단 기준)

인감증명법 제12조(인감증명서의 발급) 및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서의 발급) 및 인감증명사무편람에 따르면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 후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위임장 작성 내용 확인 시 유의사항”에 따르면 위임자는 위임을 했다는 표시로 날인 또는 서명(성명을 쓰는 것)을 하여야 하고, 위임사유를 반드시 적어야 하며,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위임일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며, 위임장의 기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임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위임장 및 동의서에 접수인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번호를 발급일자와 함께 표시하여 재사용되지 않도록 인감증명 발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인감증명을 발급하면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신청사항을 기재하고 수령인란에 본인인 경우에는 무인 또는 서명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경우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전산에 의하여 관리되는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를 사용한 서명을 받을 수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성덕면은 2021년 4월부터 2023년 3월 감사일 현재까지 인감증명을 발급하면

서 11건에 대하여 위임장에 위임 사유 및 위임날짜 등을 누락 하였음에도 위임장에 보완사항을 신청인에게 보완토록 행정지도 하지 않고 위임장을 수리하여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성덕면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12]

김 제 시

기관 · 부서명	성덕면
제 목	전입신고 사후관리 소홀
행정상 조치	통보
재정상 조치	없음
내 용	

1. 관계 규정(판단 기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신고사항의 사후확인 등)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신고, 법 제10조의3 제1항에 따른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 된 내용이 포함된 사후확인용 자료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이장(동인 경우에는 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확인용 자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하며, 통보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후확인용 자료에 관계 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성덕면은 2021년 3월부터 2023년 2월 감사일 현재까지 전입자 거주여부 확인 누락, 확인자 세대주(원) 서명 누락 등으로 부적정하게 되어 있는 전입신고 사후확인용 자료 28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전입신고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성덕면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기 바랍니다.(통보)

[일련번호: 13]

김 제 시

기관 · 부서명	성덕면
제 목	인감증명서류 이송처리 업무 소홀
행정상 조치	통보
재정상 조치	없음
내 용	

1. 관계 규정(판단 기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5조의3(인감대장의 이송) 제1항에 따르면 인감을 신고한 자 또는 인감이 말소된 자가 주소를 변경한 때 그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구) 증명청은 관련공부의 이송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인감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그 신고자 또는 말소자의 인감대장을 관련공부와 함께 밀봉하여 신증명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또한 민법 제6장 제155조 내지 제161조에서는 기간 기산점 및 만료점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제155조(본장의 범위) :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산상의 처분 또는 법률 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 말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이에 따라 구 증명청에서는 인감을 신고한 자 또는 인감이 말소된 자가 주소를 변경하여 신증명청에서 관련 공부의 이송 요청을 할 경우 이송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이송 요청을 받은 날 포함)에 인감 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인감대장을 관련공부와 함께 밀봉하여 신증명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 기간을 산정할 시 이송요청을 받은 날을 포함하되 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있을 경우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만료일인 경우에 한하여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되어야 한다.

【예시】

날짜	6. 4	6. 5	6. 6	6. 7	6. 8	6. 9	6. 10	6. 11
요일	월	화	수(공)	목	금	토	일	월

가. 6월 4일이 요청일 일 경우 (기간이 3일 이내)

- 초일(6월 4일)을 포함하므로 종료일은 6월 6일이나 공휴일이므로 그 익일인 6월 7일에 만료됨.

나. 6월 5일이 요청일 일 경우 (기간이 3일 이내)

- 초일(6월 5일)과 공휴일 6월 6일이 기간 산정에 포함 되므로 종료일은 6월 7일이 됨.

이와 같이 인감대장을 이송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송부 하도록 한 것은 전출자가 성명의 변경, 인장의 분실·마멸, 그 밖의 사유가 생길 경우 전입지에서 인감변경신고 등을 즉시 처리·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이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성덕면은 11명의 전출자에 대해 관련 공부의 이송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송 처리하지 않고 1일에서 최장 8일간을 지연 이송하였다.

조치할 사항 성덕면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기 바랍니다.(통보)

[일련번호: 14]

김 제 시

기관 · 부서명	성덕면
제 목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적정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내 용	

1. 관계 규정(판단 기준)

「농지법」 제6조에 따라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나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농지소재지 읍·면·동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하여야 하고, 신청을 받은 읍·면·동장은 농지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의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특히, 농지법 제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내이어야 하고,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하여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성덕면은 신청자 ○○○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농지 소유 상한을 검토하지 않고,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처리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성덕면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15]

김 제 시

기관 · 부서명	성덕면
제 목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부적정
행정상 조치	시정(회수)
재정상 조치	130,000원
내 용	

1. 관계 규정(판단 기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 전라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제10조 및 ‘2021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추진 지침에 따른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어업인(사업연도 기준 만 20세 이상 ~ 만 75세 미만)으로 본인의 농업외 종합소득 37백만원 이상(겸업농의 경우) 및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를 제외하도록 되어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발급되는 문화누리카드 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중복하여 부당신청으로 판명된 경우, 생생카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

또한 농업정책과에서는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대상자와 문화누리카드의 중복수혜 방지를 위한 지침[농업정책과-189(2021.1.5.)]을 읍면동에 시달한 바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성덕면은 감사대상 기간(2021.4.1.~2023.3.31.) 동안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대상자에 선정되어 보조금 130,000원을 지원받은 대상자 1명에게 문화누리카드를 중복하여 지원하였다.

조치할 사항 성덕면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도록 주의하기 바라며, 중복 지급한 130,000원을 즉시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회수)

[일련번호: 16]

김 제 시

기관 · 부서명	성덕면
제 목	장애인 복지(통합)카드 관리 소홀
행정상 조치	통보
재정상 조치	없음
내 용	

1. 관계 규정(판단 기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2022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I (P. 115)에 따라 읍면동장은 장애인에게 장애인복지카드 등을 교부하고, 교부 내역을 전산망에 등록해야 하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2022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I (P. 122) 장애인 등록증 등의 회수 및 폐기에 따라 읍면동장은 사망, 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거주불명자 제외)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회수하여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성덕면은 사망자 18명의 장애인 복지카드를 회수하지 않는 등 장애인 복지카드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성덕면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기 바랍니다.(통보)

[일련번호: 17]

김 제 시

기관 · 부서명	성덕면
제 목	의료급여증 관리소홀
행정상 조치	통보
재정상 조치	없음
내 용	

1. 관계 규정(판단 기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5조(의료급여증의 반납 및 회수)와 「2022년 의료급여 사업안내」(p87) 의료급여증의 반납 및 회수에 의하면 수급권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의료급여가 중지된 때, 자격취득·상실, 기재사항 변경, 종별변경, 가구주변경 등이 있을 경우 의료급여증을 반납 및 회수하여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성덕면은 사망, 자격상실, 종별변경 등에 해당하는 14세대에 대해 의료급여증을 회수·폐기하지 않아 의료급여증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성덕면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기 바랍니다.(통보)